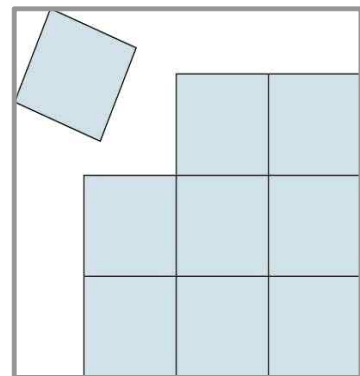


IV. 학부모 대상 교육 자료

1.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
2. 학부모 대상 인권 교육
3. 학부모 대상 보건 교육
4. 학부모 대상 교권 교육
5. 학부모 대상 공교육정상화법 교육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은 대부분 그 피해 사실을 부모나 교사에게 알리지 않고 친구에게만 의논하거나 혼자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 학생의 경우는 더더욱 부모에게 알려지면 야단맞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자신의 가해 사실을 숨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부모님들의 세심한 관찰과 주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조그마한 징후라도 발견하게 된다면,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그것이 자녀의 안전을 지켜내는 첫걸음이 됩니다.

★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째, 안전 확보에 힘쓴다.

한 동안은 등하교 길에 동행하여 피해발생 위험을 줄이고, 담임선생님께도 알려져 학교생활에서 세심한 주의를 부탁하여야 합니다.

둘째, 객관적 사실 및 현재의 상태를 파악한다.

내 자녀의 입장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건의 개요, 진위 여부, 피해 기간 및 강도, 가해자의 신상 파악 등을 한 후, 원인을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건 처리를 위한 도움을 요청한다.

학교폭력문제는 학교의 처리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학교와 담임선생님께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넷째,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돕는다.

내 자녀가 밖에서 맞고 들어온다는 것은 부모로서 매우 속상한 일입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아이의 마음은 더욱 힘들고 괴롭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이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다섯째,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지속적으로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자주 대화를 하면서 다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야 합니다.

☞자녀가 피해를 당했을 때, 이런 말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x 넌 왜 그렇게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지?
- x 별거 아니야, 엄마, 아빠도 다 맞으면서 컸어.
- x 그거 하나 해결 못하면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거야.
- x 너도 싸워. 맞고만 있지 말고 너도 때리란 말야.
- x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할테니 넌 가만히 있어.

- x 시간이 해결해 줄거야.
- x 엄마 아빠 말고 아무한테도 너 맞은 얘기 하지마. 그러면 널 깔 볼거야.
- x 친구 같은 건 없어도 되니까 공부만 신경 써.

☞ 이렇게 말해주세요.

- o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구나.
- o 엄마 아빠가 지켜보고 있을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 o 그래도 이렇게 잘 버텨온 것을 보니 훌륭하구나.
- o 도움을 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란다.
- o 싫은 것을 싫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용기 있는 사람이야.
- o 자, 이제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같이 이야기 해볼까?

★ 우리 아이가 가해자라면 어떻게 대처하고 지도해야 할까요?

iii

가해부모의 대처 방안

첫째, 흥분하지 않고 상황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아이 편 만 들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 및 정보 수집이 가장 선행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흥분하여 일을 감정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자녀에게 불이익이 갈 수도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둘째, 학교의 중재를 요청합니다.

학교폭력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학교에 속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학교 측의 적절한 중재를 통해 사실여부와 처리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학교, 특히 담임선생님의 도움을 구하고,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자녀의 폭력적 행동의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보아야 합니다.

일시적인지 구조적인 원인인지 알아보고 이러한 근본원인에 대한 치료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심리상담자나 의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사건이 벌어지고 난 후라면 이 행동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교육적으로 더욱 중요합니다. 부모가 나서서 문제 해결을 다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연습을 해야만, 다음번에 그러한 행동을 다시 하지 않게 되고, 또한 사회 속에서 책임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피해 학생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다섯째, 잘못된 행동은 지적하되 인격적으로 수용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한 야단이나 체벌, 모욕감을 주는 말과 행동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고, 자녀에게 부적절한 죄책감 및 분노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섯째, 일단 문제가 해결되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학교생활을 점검해 나가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실수하기 쉬운 때이고, 아직 모든 것이 미성숙하므로, 성인들의 지속적인 보호와 지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실수를 통해 좋은 교훈을 얻었다면, 이후에 또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과도한 간섭이나 불신을 표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학교폭력 유형 ♠



언어폭력

- **명예 훼손**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 **모욕**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 **협박**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언어 폭력은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과중 처벌을 받습니다.



신체폭력

- **감금**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상해, 폭행**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
- **약취강제** (폭행, 협박을 통해)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
- **유인**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

장난을 빙자해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는 행동 등도 상대학생이 폭력행위로 인식한다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사이버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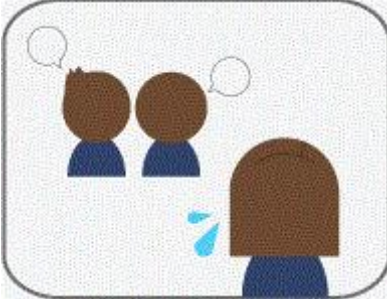
-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로 특정인에 대한 '저격글'이 그 한 형태임
-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강요갈취

-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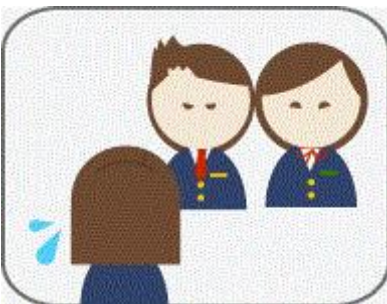
따돌림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먹이기, 비웃기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등



성폭력

-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강요

- 강제적 심부름·숙제·빵·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 강요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 평등권(平等權)이란?

정의

모든 인간을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다룰 것과 국가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요구하는 권리.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의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그 밖에도 교육에 있어서의 기회균등, 혼인과 가족생활의 양성(兩性)의 평등, 선거에서의 평등 및 경제질서 등의 규정에서 실질적 평등의 구현을 위한 적극적 규정을 두고 있다.

평등권의 배경은 고대 그리스의 정의사상과 ‘신(神) 앞의 평등’이라는 중세 기독교사상에서 나왔으나, 평등원칙의 확립은 합리주의적인 근대 자연법사상과 민주주의의 원리로 이루어졌다. 평등의 원칙은 1776년 미국 버지니아 권리장전(權利章典), 미국독립선언, 프랑스인권선언, 프랑스헌법(1793) 등에 등장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평등권은 두 번의 의미상의 변천이 있었다. 즉, 평등권의 대국가적 효력(對國家的效力)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것으로서 법적용의 평등에서 법정립(法定立)의 평등으로 바뀐 것이 첫번째 의미의 변천이고, 추상적·형식적 평등원칙의 구체적·실질적 평등원칙으로 바뀐 것이 두번째 의미의 변천이라 할 수 있다.

평등권은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공권으로서, 입법에 대하여는 위헌심사를, 불평등한 처분에 대하여는 재판을 통하여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기본권보장에 관한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불평등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객관적 법질서의 근본규범성이 있다. 그리고 평등권의 주체는 모든 국민이고,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단체와 상호주의 원칙하에 외국인이라도 적용된다고 하겠다.

‘법 앞의 평등’에서의 법은 헌법·법률·명령·규칙 등의 성문법만이 아니고 관습법 등 불문법을 포함한 일체의 법을 의미한다. ‘법 앞의 평등’이라고 할 때는 다음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법적용평등설인데, 초기의 사상으로 법률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적용만을 평등하게 하면 된다는 것이다 [立法非拘束論].

또 하나는 법정립평등설(法定立平等說)인데, 법의 적용이 평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법의 내용이 평등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立法者拘束論]. 이것이 현재의 통설이다.

남녀동등인 관계로 동일노동인 경우에는 동일임금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신앙이나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되어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사법(私法)은 물론 행정·입법·사법(司法)까지 모두 포함된다.

평등에는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이 있는데, 절대적 평등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절대적으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상대적 평등은 평등한 것에는 평등하게,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것에는 불평등하게 대우한다는 것으로 합리적 차별을 인정하는 것이다.

오늘날은 상대적 평등이 옳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상대적 평등의 기준으로서 ‘자의(恣意)의 금지’와 합리적 차별 등을 들고 있다.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은 물론 그 밖의 다른 근거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은 금지된다. 그러나 평등권의 예외로서 대통령·대통령선거인·국회의원·정당 등에 특권이 있고, 공무원의 근로삼권제한, 군인·군무원의 이종배상 제한 등이 있다. 이것은 모두 <헌법>에서 예외로 인정한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평등권](#) [平等權]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사진 1



사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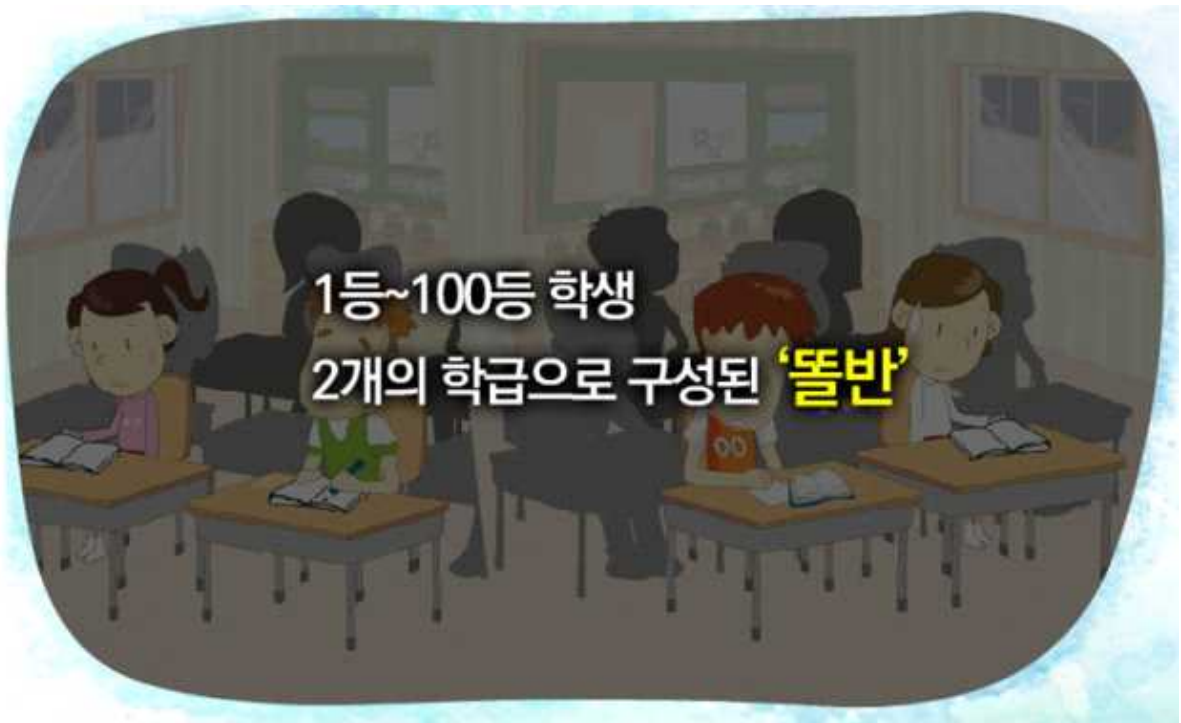


사진 3



사진 4



제6 절 자치와 참여의 권리

제8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동아리, 학생회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의 자치 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성적,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권리
2. 학교 운영, 학교 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3.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학생자치활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이유는, 학생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서로 다른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 대화와 토론,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을 일상화함으로써,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입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학생자치활동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생자치기구의 구성에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징계, 성적, 교내·외 학생활동 등의 이유로 제한해서는 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학생들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 보장 및 예산·공간 확보 등 필요한 제반 여건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참고 결정례 및 사례

● 교칙 개정 활동 등을 이유로 한 학생회장 입후보 제한

OO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학생회 담당 부장 교사의 추천을 받으려 하였으나, 해당 교사가 위 학생이 '교칙 개정 활동을 하고, 촛불 집회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추천을 거부하자, 위 학생이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한 사안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사안과 관련하여, 위 학생이 촛불집회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방과 후였고 어떠한 폭력도 행사하지 않는 평화적인 방식의 집회 참가였으므로, 이는 「헌법」 및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행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위 학생이 교칙 개정 활동을 하면서 다소 과장되거나 거친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학생회장 선거 과정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후보자를 평가하고 선택할 문제이지,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미리 교사에 의해 후보자가 되는 것 자체가 배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⁴⁹

● 정기적인 학생회의 개최와 운영 보장

학생회를 통해 급식환경이나 벌점제도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싶으나, 2학기 내내 학생회의 및 학급회의를 전혀 개최하지 않자 이에 대하여 선생님에게 문의한 결과, '앞으로도 개최할 계획이 없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매진하라'는 답변을 들은 학생이 이에 대하여 상담한 사례입니다.

학생은 학생회를 통해 자신들의 복지 개선과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하고, 학생 대표들은 이를 토대로 전체 학생을 대표해 학교 측에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우리 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사항입니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의 연령과 성숙도에 부합하는 학생자치가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즉, 위와 같은 사례에 있어서 학생회를 소집하는 것과 운영의 자율성 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⁴⁹

제19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 (이하 '학교 규정'이라 한다)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지켜야 하는 당사자임에도, 해당 규정이 만들어지거나 수정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참여가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학생은 자신이 지켜야 할 학교생활규정의 제정이나 개정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위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과정에 참여하게 될 경우, 규정 자체의 정당성이 강화되고 학생들이 규정을 잘 지키는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19조는 학생들이 학교 규정을 제정·개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협약」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⁵⁰ 또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11(2009년)에서, “아동에게 개인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와,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협의함에 있어 집단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구별”하면서, 후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와 관련해 아동이 협의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⁵¹

이러한 권리 부여는, 학생들에게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 수 있는 기반으로, 우리 교육이 추구하는 교육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는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과정에 학생대표에게만 참여할 권리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일반 학생들에게까지 대폭 확대하여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장은 학생들이 쉽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 내 자유게시판, 건의사항 요구함 등의 의견수렴창구, 설문조사, 학생회를 통한 의견 수렴, 학교운영위원회 참석 등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또한 익명성을 요구하는 학생의 권리 보장, 학교 구성 간 활발한 의사소통 등도 함께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의 보장은, 형식적으로 학생회 등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기회를 주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학생회 등의 의견이 학교정책 형성 과정과 학교생활규정을 제정·개정하는 과정 등에 실질적으로 반영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학교생활규정 등의 학교 규정은 학교의 구성원이 모두 지켜야 할 규범이므로,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알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 및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고, 학생들에게 학교생활규정 등 학교 규정을 열람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안내하여야 합니다.

참고 사례

● 학생회 외의 다른 학생기구의 설립

모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생회가 학교운영이나 학생 복지 개선에 별다른 관심이 없음을 이유로, 별도의 새로운 학생기구를 만들어 학교에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고 싶는데, 이것이 가능할지 문의한 사례입니다.

학교 교칙에 의해 설치된 학생회가 아니라는 이유로,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를 금지하거나 활동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아동권리협약」 제17조는 학생의 자발적 결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는,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가 법령이나 교육 윤리에 반하지 않고, 학생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합리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적극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⁵³⁾

청소년기 학생들은 ‘청소년기’ 자체가 갖는 여러 가지 발달적, 심리적 특성이 성폭력의 잠재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호르몬 분비로 성 특징이 나타나며 강한 성적인 욕구를 갖게 됩니다. 가족의 사회화 기능이 축소되고, 대화의 단절로 가치관 및 도덕관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유해한 사회 환경 요인으로 음란물을 여과 없이 접하게 되고, 인터넷과 핸드폰으로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고 살펴봄으로 성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 성폭력이란?

성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행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이다.

2. 성(폭력,희롱,매매) 예방 교육에 임하는 부모님들이 가져야 할 자세

- ① 성교육을 위해 부모님들이 먼저 변화해야 합니다.
 - 성에 대하여 엄격하며 금기시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로 인식합니다.
- ② 자녀들의 성적 성숙을 인정하여 현실감각을 갖고,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③ 부모가 일상생활 속에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 ④ 딸이나 아들 모두 이성(異姓)의 성 발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 ⑤ 성교육은 과학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 윤리적인 면을 병행하여 가르쳐야 합니다.
- ⑥ 질문에 답할 때는 당황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불충분한 대답이라도 좋으나,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 ⑦ 자연스러운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 ⑧ 준비하고 있다가 계기를 포착하여 성교육을 합니다.
- ⑨ 정확한 성지식을 알고 있어야 잘 지도하므로 부모 자신도 올바른 성에 대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 ⑩ 부모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전문교사나 상담기관을 찾습니다.

3.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발생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가. 여성 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긴급 구조보호, 상담
나. 해바라기 아동센터(아동성폭력 전담센터) T.1899-3075

다. 가정폭력, 학교폭력,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 ONE-STOP 지원센터(단국대학병원내)

◆ 인근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성범죄자알림e사이트: www.sexoffender.go.kr)

◆ 학교폭력·성폭력신고: 112·117 <http://www.safel82.go.kr/index.do>

◆ 우리학교에서는 성(性)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최근 음란물에 중독되어 성범죄를 일으키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성을 소재로 하는 자극적인 영상, 사진, 소셜 등을 쉽게 접하게 됩니다. 호기심으로 접하게 되는 음란물은,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고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어 실제로 실행하게 됨으로 중독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아이들이 음란물에 노출되고 있지 않은지 관심을 갖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폭력이란 수단을 가지고 상대방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힘이나 무기로 가족을 위협하고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어 유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가정폭력 유형

- 1) 신체적 폭력 : 눈빛, 행동, 제스처, 무기를 휘두르거나 위협, 물건 파괴 등
- 2) 정서적 학대 : 무시하기, 죄책감이나 모욕감 느끼게 하기 등
- 3) 경제적 폭력 : 생활비 제공하지 않기
- 4) 성적 폭력 : 성적인 학대



2. 가정폭력의 특성

- 1) 은폐성 : 사소한 일, 사생활 등으로 치부
- 2) 지속성 반복성 :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 반복 됨
- 3) 중첩성 : 배우자 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 여러 형태의 폭력이 중첩 됨

3. 가정폭력에 대한 편견

- 1) 경제력, 학력 수준과 상관없이 전 계층에서 발생
- 2) 가정폭력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
- 3) 피해자의 탓이 아니라 상대방을 통제, 지배하기 위해 발생

4.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 여성 긴급 전화 1366

- 365일 24시간 위기 개입 상담
- 긴급피난처 운영 : 7일 이내 긴급보호
- 지역관련 기관 연계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평등하고 배려하는 가족문화를 만들고, 다문화 가족원의 문화를 존중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권리 존중을 실천하고, 폭력이 처음 발생했을 때 강력하게 대응하며, 도움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5. 가정 내 양성평등은 이렇게

가. 가정 내에서 부부간에 평등하여야 합니다.

평등한 부부란? 남편과 아내가 성적 구분에 의한 역할분담이 되어있지 않고, 필요에 따라 돈벌이, 집안일, 육아, 의사결정을 분담하는 부부이며,

- 1) 남편과 아내의 시간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 2)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설거지나 아이를 돌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 3) 여성도 남성만큼 사회활동과 여가시간을 가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부입니다.

나. 자녀양육, 교육에 있어서 아들, 딸을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합니다.

- 1) 자녀에게 격려, 칭찬, 꾸지람 등을 할 때 자녀의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하십시오.
- 2) 예절이나 단정한 용모는 남녀가 모두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는 차원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 3)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남녀 공동의 책임이자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 4) 진로, 학업 선택 시 남녀영역이 따로 있다는 고정관념을 배제하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미래의 인간상은 전통적인 성역할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라 기존의 고정된틀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사회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게 될 날을 기대해 봅니다.

학생에게 자주 발생하는 주요 법정 감염병 발생 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이 됩니다. 이들 질병은 다른 학생에게 전염이 되므로 반드시 등교 중지를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감염병에 대한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학부모님께선 접종을 완료해 주시고 만약 자녀가 감염병에 걸리면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등교중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등교 중지 대상자

- ※ 등교중지 대상자 : 법정감염병 환자, 법정감염병 의사환자, 법정감염병 병원체 보유자
- ※ 등교중지 제외 : (결석 시 병결로 처리)의사의 진단에 의해 타인에게 전염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등교 중지 방법

- 1) 감염병이 의심되면 등교하기 전에 담임선생님께 연락한 후 병원에 갑니다. (발열이나 설사 등 진단을 요하는 경우)
- 2) 병원 진료 후 감염병 진단이 나면 담임선생님께 전화연락을 하시고 격리 치료를 합니다. (※ 병원 진료 외 외출 금지, 학원도 가지 않습니다.)
- 3) 치료, 완치 후 병원에서 확인 받은 의사의 진료 확인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감염병으로 결석한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단, 의사의 확인서에 감염성 질환명, 격리치료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격리 치료 기간만 출석으로 인정됨)

3. 유의사항

- 1) 감염병마다 감염 기간이 모두 다르므로 전문의가 지정한 기간 동안에는 가정에서 격리 치료합니다. (※ 병원 진료 외 외출 금지, 학원도 가지 않습니다.)
- 2) 등교중지 기간보다 미리 등교 시에는 감염성이 없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흡연 예방과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부모님의 역할

청소년들의 흡연을 예방하는 데는 부모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 부모님께서 흡연을 하는 경우, 강한 의지로 금연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나. 자녀에게 혹은 가족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지 않습니다.

다. 자녀가 함께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습니다.
- 어른이 되면 담배를 피워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 흡연 시 발생 하는 독성물질 중 가스형태의 화학물질은 벽, 가구, 옷, 장난감, 집 먼지 등의 부착 한 뒤 몇 시간~몇 달 장기간 재배출(3차 간접흡연)

라. 가족과 함께 외식 시에는 금연 지정 음식점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마. 자녀가 담배를 피우는지 잘 살펴주시고 금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전하되 무엇보다 사랑으로 대화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1. 자녀의 행동과 말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 만약 자녀가 이런 말을 하거나 일기, 낙서, SNS에 이런 글을 적는다면 ...

▶ 죽고 싶다는 직접적 표현

“정말 죽고 싶어.”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깨어나지 말았으면...”
 “내가 사라져 줄게.” “내가 사라질 때...” “멀리 떠나고 싶다.” “안녕.”
 “날아가 버리고 싶다.” “더 이상 아무 것도 문제가 아니야.”
 “나에게는 사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 “이젠 정말 끝이야.” “잘 지내.”
 “끝내 버리고 싶어.” “이제 모든 걸 끝낼 거야.” 내 인생을 증오했어.”
 “나를 버려 너에게 보복할거야.” “자살하는 사람의 심정을 알 것 같아.”
 “앞으로 나를 볼 일은 없을 거야.” “환생을 믿니? 언젠가 다시 태어나면
 좋겠어.” “다시 만나지 못할지 몰라. 그 동안 고마웠어.”

▶ 자살을 준비하는 행동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미 있는 개인소장품이나 수집품들을 주변 사람에게 나눠줌 ■ 소중한 물건이나 받았던 상장을 버리거나 태움 ■ 자살에 관한 책을 읽거나 글을 씀 ■ 자살을 시도한 일이 있는 사람들을 찾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면, 진통제, 감기약 등 자살 목적으로 약을 모아 감추어 둠 ■ 자살, 엽기 사이트에 심취 ■ 펜, 줄, 칼, 전선 등 자살도구를 준비하여 감추고 유서를 작성함 ■ 자살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자살 장소를 탐색함 |
|--|--|

2. 그럴 땐 이렇게 해 보세요.

◆ 자살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물어 보세요.

- 돌려서 말하지 말고, 가능한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물어보세요.
- 진지한 태도로 자살과 관련된 모든 것(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 시도 등)을 물어보세요.
- 자살계획이 있다면 직접적으로 행동화할 것인지 물어보세요.

◆ 반복해서 이야기를 들어 주세요.

- 왜 자살을 생각하는지, 삶을 지속할 만한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인지, 너무 힘든 나머지 놓치고 있던 삶의 이유가 있지는 않은 지를 답답한 마음이 풀릴 수 있도록 들어주세요.
- 자살이 옳은지, 그른지 또는 심리상태가 바른지, 잘못되었는지 논쟁이나 비판이나 충고, 설교, 조언하지마세요.
- 말과 몸짓으로 이해한다는 표현을 해주세요.(시선이나 자세는 아이 쪽을 향하고 아이가 힘든 이야기를 할 때, 고개를 끄덕이거나 신중하게 침묵하는 태도도 필요해요.
- 그리고 아이의 말을 요약해서 부모님이 이해한 바를 풀어서 다시 얘기해 주세요.

◆ 자살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 놓으세요.

◆ 곁에 머물러 주세요.

- 자살은 충동적이므로 잠깐 고개를 돌린 순간에도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 도움을 요청하세요.

- 자해경험, 약물 복용 등으로 자살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에는 정신과 전문의나 자살예방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 Wee센터, 정신보건센터, 생명의 전화, 희망의 전화, 사랑의 전화)

1. 포괄적 정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교원의 교육권이 교육행정기관, 학교관리자, 동료교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언론 등에 의해 부당하게 간섭받거나 침해되는 행위

가. 교육자로서의 교육할 권리 침해

-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 제약
- 관리자의 지도·감독권 남용
- 학생·학부모의 수업 방해

나.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신분 침해

- 부당한 신분·인사 상 조치
- 학교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피해 배상 요구

다.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침해

- 폭언·폭행·성폭력 등 신체적 위해
- 명예훼손·모욕·성희롱 등 인격권 침해
- 언론기관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

2. 법률적 정의

가.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나.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법 제15조제1항에서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1. 교권보호위원회

가. 설치 근거

-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제6조의2
- 「전라북도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칙」

나. 주요 내용

- 도교육청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역할을 강화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자체적인 교육활동 침해 판단기준 마련,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사건 조사, 가해학생·학부모에 대한 조치 권고 등 교육활동 보호 및 침해 사건 처리 업무를 주관함.
- 전라북도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보호 시책 심의, 단위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못한 사건의 조사 및 분쟁 조정, 피해교원 치유 및 복귀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함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가. 설치 근거

-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나. 주요 내용

- 교원이 징계 처분 및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며, 소청 심사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국·공립학교 교원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3. 고충심사위원회

가. 설치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9조(고충처리)
-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나. 주요 내용

-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분상의 문제에 대하여 고충심사청구에 대한 심사와 인사상담을 통하여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고충처리 대상

-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봉급·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무시간·휴가에 관한 사항,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등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승진·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근무성적평정·복무 등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 상훈 등 업적 성취에 관한 사항
- 기타 신분상의 문제에 관한 사항
성별·연령 등 차별대우에 관한 사항,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는 고충심사위원회 심사 청구인이 될 수 없음

4. 학교장 통고 제도

가. 설치 근거

- 「소년법」

나. 주요 내용

- 학교장이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접수시킬 수 있음.
- 법원의 처리 내용이나 결정이 검찰에 수사 자료로 통보되지 않아 범죄 경력이 기록으로 남지 않으므로, 비행에 대한 처벌보다는 심리치료를 우선하는 등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둠.
- 대상자는 촉법소년(10~14세 미만)이나 범죄소년(14세~19세 미만) 또는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10~19세 미만)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약칭: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2016.12.20.] [법률 제14392호, 2016.12.20., 일부개정]

교육부(공교육진흥과) 044-203-6334

제1조(목적) 이 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1. "교육관련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각종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선행교육"이란 교육관련기관이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하거나 제공하는 교육 일반을 말한다.
 - 가. 국가교육과정: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 나. 시·도교육과정: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 다. 학교교육과정: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편성·운영되는 단위학교 교육과정
3.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의2(해석·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학교 및 교원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5.29.]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정한 교육목표와 내용에 맞게 학교가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공정하게 학생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행교육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시정하기 위하여 조사·연구·분석·교육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의 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편성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부모·학생·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2(교원의 책무)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12.20.]

제6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교원의 상담활동) 교원은 지도하는 학생이 사교육에 의한 선행학습으로 학교 수업에 영향이 있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학부모 등에게 필요한 교육적 조언이나 상담을 할 수 있다.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운영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

③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법률 제14149호(2016.5.29.)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은 2019년 2월 28일까지 유효함]

제9조(학교의 입학전형 등) ① 학교별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은 그 내용과 방법이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설립목적과 특성에 맞도록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
2. 각종 인증시험 성적
3. 각종 자격증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한 경우 그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제10조(대학등의 입학전형 등) ① 대학등의 장은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② 대학등의 장은 제1항의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제10조의2에 따른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③ 대학등의 장은 제2항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해당 대학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① 대학등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실시 방법,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대학등의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 중 1명 이상은 현직 고등학교 교원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5.29.]

제11조(교육과정정상화심의회위원회) ① 국립학교 및 대학등의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과정정상화심의회(이하 "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1. 국가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3. 국립학교 및 대학등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위원회에 요청한 사항

③ 교육과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재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⑤ 교육과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 소속 관계 공무원
2. 교육과정, 학습이론 및 대학 입학전형 등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학부모, 학부모단체 소속 회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그 밖에 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회위원회) ① 학교의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회(이하 "시·도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교육감은 지역 여건, 학교 및 학원 수 등을 고려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별로 교육과정정상화심의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도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1.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시·도교육과정위원회에 요청한 사항

③ 시·도교육과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교육과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재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⑤ 시·도교육과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그 밖에 시·도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 등)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4조제1항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교육관련기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관련기관이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 및 제10조의2를 위반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교육과정위원회 또는 제12조에 따른 시·도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교육관련기관에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교육관련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교육관련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관련기관에 대하여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정원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폐지 또는 학생 모집 정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신청) 교육관련기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변경명령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6조(적용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
2. 「초·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3. 국가교육과정과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상 체육·예술 교과(군), 기술·가정 교과(군), 실과·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군), 전문 교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제14392호, 2016.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